

시민참여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이혜림**

이영라***

〈目 次〉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선행연구	V. 결론
III. 연구설계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시민참여 유형과 그 특성의 변화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행정 연구원의 2015년과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집단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시민참여 유형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돌파하면서 2015년 세 개 집단에서 2017년 네 개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각 집단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순응형, 도구형, 방관형 및 이탈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한국인의 의무적 시민의식 규범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참여적 시민의식 규범은 상당히 많이 성장하였다. 셋째, 각 집단에 속한 시민들이 가진 자원의 특성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넷째, 모든 집단의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변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시민참여, 시민참여 유형, 시민의식 규범, 탈물질주의, 잠재집단분석】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 A2924563).

** 저자,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 전임연구원(hyerim0608@gmail.com)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강사(lee.youngra.0304@gmail.com)

논문접수일(2020.1.22), 게재확정일(2020.3.3)

I. 서론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Democracy Index 2018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67개국 중 21위를 기록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를 포함하는 5가지를 측정한다. 한국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시민자유 8.24점, 정부기능 7.86점, 정치문화 7.50점, 정치참여 7.22점으로 10점 만점에 평균 8.00점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선거과정, 다원주의, 시민자유 등의 제도적 부분은 잘 발전되어 있지만,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비롯해 활발한 정치참여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특징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가 반영된 결과이다. 한국은 1970~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저항적 시민참여의 토대 위에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였다.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된 것이다. 이후 본격적인 대의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대의민주주의는 투표에 의한 선거참여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제도적 참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선거 참여의 시대가 열리면서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자유 및 권리가 개선되었고, 시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 습득이 가능해졌다. 이는 다양한 자율적 시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김용철, 2016). 이와 같은 참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어 나갔다.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내용적 측면은 몇 가지 아쉬운 면을 갖는다. 우선 민주주의적 제도가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권력 집단 내에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등 권위주의 정부의 관성이 일부분 남아 있었다. 이는 정부 불신으로 이어졌고, 정부에 대한 견제로서 시민사회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시민사회는 집회와 시위 등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의사를 표출하며 정책 과정에 비판적 참여자로 나서게 되었다(주성수, 2017). 또한,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며 시작된 시민참여는 민주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제도를 비판하며 출발하여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대행자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참여 문화를 남기었다. 김동노(2013)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변혁을 주도하는 운동을 이끌어감에 따라, 일종의 준정당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시민운동의 역할을 잘 수행함에 따라, 유사정당의 정체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었다. 이에 시민 개인의 참여는 제도적 발전의 속도만큼 성숙하지 못하였으며,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한국 사회의 이런 맥락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시민참여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공청회, 협의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창구를 다양화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적극적인 참여제도들이 설계되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참여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양해져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Oh & Park, 2013). 더하여, 인터넷의 발전 및 정보지식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전자정부가 실현됨에 따라 제도적인 참여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를 환영하는 정부의 제도적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행위도 확대되고 있다. 육아공동체 등과 같이 근린단위의 커뮤니티에의 참여가 늘어났으며, 온라인을 통한 모임 등 참여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해결을 위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 등이 발전됨에 따라 정부정책 및 제도에의 참여 외에도 개개인의 시민들이 정책 및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기술발전과 함께 시민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시위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출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장과 함께 시민참여도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참여의 유형은 어떠한가? 기존에 시민참여 유형은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등과 같은 참여 형태에 따른 분류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에 있어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른 논의 외에 시민들의 인식에 따른 참여유형을 구분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식 요인을 토대로 시민참여의 유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시민참여 유형과 그 특성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사회의 시민참여의 유형이 어떻게 분화되는지 LCA(latent class analysis)를 통해 도출하였다. 특히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비용 및 규범에 대한 가치관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둘째, 도출된 각 유형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시민참여의 유형과 특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2015년도와 2017년도 두 해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데이터는 2016년 하반기의 탄핵 집회가 발생했던 당시 진행된 조사 데이터로,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발생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점을 비교함에 따라, 시민참여의 유형 변화 및 흐름에 시민참여가

활발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탐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시민참여와 시민참여 유형

사회적 활동으로서 시민참여의 개념은 누가, 무엇에 대해, 언제,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이승중·김혜정, 2018: 52-60). 참여 형태와 수준은 시민과 정치체제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Verba와 Nie(1972)는 시민참여가 시민이 정책 결정자 충원, 정책 결정 등의 정부 통치활동에 개입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매우 좁게 정의한 반면, Conge(1988)는 꼭 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공자원 배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매우 넓게 정의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참여의 결과는 결국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다루는 정치 과정으로 수렴되는 바, 시민참여 영역을 반드시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 행위에 국한하여 다룰 필요는 없다.

Scaff(1975)는 시민참여의 개념을 “상호작용으로서의 시민참여”와 “도구적 행동으로서의 시민참여”로 대별하였다. 그는 참여가 국가의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서 시민간의 관계와 시민들의 행동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상호작용으로서의 시민참여가 시민의 정치 지식과 역량 배양, 자아실현 등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식을 높이고 정의를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면, 도구적 행동으로서의 시민참여는 권력을 견제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증대시키며, 의사결정 과정의 합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시민참여는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시민이 사회의 평등, 정의, 공익 증진을 위해 공공문제(public affair)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구체적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시민참여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간주하고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을 쏟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 유형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시민참여 유형 연구의 초점은 결과로 나타나는 참여자의 행동에서 그 참여자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인 동기로 이동하고 있다. 즉, 가치정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초기 시민참여 유형 연구는 참여 행태를 기준으로 한 일차원 모형(Milbrath et al., 1977; Seligson, 1980; 김욱·김영태, 2006)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성향과 인식에 초점을 둔 이차원 모형(Lyons

& Lowery, 1989; Sabucedo & Arce, 1991; 최태현, 2014)이 제시되고 있다.

일차원 모형은 시민참여의 방법을 관습과 제도 등의 기준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유형화한다. Seligson(1980)은 시민참여를 상호 배타적 관계인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범주화하면서 관습적 참여(Barnes & Kaase, 1979), 합법적 참여(Muller, 1982) 등은 용어만 다를 뿐 제도적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참여 방법을 의미하는 유사 개념으로 보았다. 제도적 참여에는 투표, 선거활동, 정치토론, 정당지원, 정치적 집회참석, 공직자 및 정치인과의 접촉 등이 포함되고, 비제도적 참여에는 서명운동, 온라인 활동, 정치적 소비, 시위 및 집회 참여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적 현상을 기준으로 한 유형의 기저에는 비제도적 참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내포되어 있다(Sabucedo & Arce, 1991: 94).

김옥·김영태(2006)는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유형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시민참여 유형을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로 분류하였다. 참여의 비용과 편익이 시민들의 참여 유형 선택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쉬운 참여’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투표가 대표적인 반면, ‘어려운 참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청원서 서명, 자발적 선거운동, 시위, 파업, 농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요인이 쉬운 참여 유형에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어려운 참여 유형일수록 탈물질주의자의 참여가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차원 모형은 참여자 개인의 성향, 인식 등 가치정향 변수를 배합하여 네 개의 유형을 구분하고 개념화 과정에서 각 유형과 시민참여의 방법을 연결시킴으로써 시민참여를 유형화한다. 이는 일차원 모형이 유형간 상호 배타성이 높지만, 유형내 동질성이 낮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다양한 범주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섬세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념화의 적절성, 실증분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Sabucedo와 Arce(1991)는 참여 방법과 개인의 성향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두 기준이 지나치게 이질적이었던바, 적절한 개념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¹⁾ Lyons와

1) 이 연구는 ① 참여 방법(예: 제도(within system) vs. 비제도(out-of-system))과 ② 개인의 정치성향(예: 진보 vs. 보수)을 기준으로 시민참여 유형의 개념화를 하고, 자신이 제시한 개념형 모델을 군집분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① 선거 관련 참여(electoral persuasion), ② 관습적 참여(conventional participation), ③ 폭력적 참여(violent participation), ④ 비폭력적 참여(non-violent participation) 네 개 집단이 도출되었지만, 개인의 정치성향이 적절한 기준이 아니었던바,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적 유형화 모델을 검증하지는 못했다(Sabucedo & Arce, 1991: 99). 그러나 이 연구는

Lowery(1989)는 참여자 개인의 적극성과 성향을 기준으로 시민참여의 유형을 개념화했지만, 분석방법의 낮은 정합성 문제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얻음으로써 자신이 제시한 모형을 수정해야했다. 최태현(2014)은 시민의식 규범의 속성 가운데 참여가치 인식 수준과 정책 이해도를 기준으로 시민참여를 유형화하고, 변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네 개의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모델의 개념화가 적절한지 검증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지만, 자칫 평균의 함정에 빠져 시민참여 유형의 실제 특성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균값은 실제 시민들의 참여 유형 수준, 특성 등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유형화 작업에서 참여방법 요인들을 주요하게 활용한 것과 달리, 참여 행위를 이끌어내는 개인의 가치정향 변수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2. 시민참여 유형 결정요인: 시민의식 규범과 탈물질주의

시민참여의 주요 영향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적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 등이 언급된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시민들은 생존과 안전의 문제 외에 자신의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인적자본 수준을 높이는데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이들은 높은 정치 효능감과 사회의 평등, 정의, 공익 증진을 지향하는 행동 양식을 갖게 된다. 시민들은 풍부하게 제공되는 정보를 인지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한다. 이때 사람들 간의 관계는 주로 느슨하게 연결된 교량형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는 참여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이숙중·유희정, 2010). 이상의 내외부적 요인들은 참여로 표출되는 행동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체계 형성에 영향을 준다. 연구자는 한 사회의 문화 속에 배태되어 있는 시민의식 규범과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참여자의 가치체계 형성에 지배적인 영향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시민의식 규범과 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이 각각 시민참여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본다.

일군의 학자들은 참여자 개인이 갖고 있는 시민의식 규범의 수준과 참여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사회 안에 다양성과 복지수요 등이 높아지면서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시민참여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Putnam(2000)은 시민참여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충격

이전까지 비제도적, 비관습적 심지어 불법적이라고 여겼던 시민참여의 범주를 비폭력적, 폭력적 참여로 분리했으며, 비폭력적 참여가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적인 결론을 제시한 반면, Inglehart와 Welzel(2005)은 시민참여의 방법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지 절대적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회경제적으로 발전된 사회일수록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비제도적 영역에서도 활발한 참여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진 시민들이 도구적 행동으로서의 시민참여 속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됨으로 시민의식 규범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결과 참여의 영역이 과거에 비해 확장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Dalton, 2008; Scaff, 1975).

시민의식 규범은 준법정신, 사회문제에 대한 숙의, 연대, 참여 등 다면적 속성으로 구성된다(Denters et al., 2007).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규범이 내재화되기 때문에 참여자의 시민의식 규범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착안한 Dalton(2008)은 시민의식 규범의 속성을 ‘의무적 시민의식(duty-based citizenship)’과 ‘참여적 시민의식(engaged citizenship)’으로 대별하고 개념화했다. 의무적 시민의식 규범을 가진 시민이 제도적 범위 안에서 주어진 대안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의 활동을 한다면, 참여적 시민의식 규범을 가진 시민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창을 열기위해 직접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실증연구의 결과는 시민의식 규범의 속성이 시민참여 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지배적인 영향요인임을 지지한다(Chang, 2016; Dalton, 2008; Denters et al., 2007; Hooghe et al., 2016; Mcbeth et al., 2010; Oser, 2017).

시민참여 방법은 탈물질주의 가치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 참여적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탈물질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택·박재홍, 2011; 김욱·김영태, 2006). 탈물질주의 가치는 생존과 안전 이상의 가치인 행복, 삶의 질, 웰빙, 복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여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즉, 자기표현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추구하기 때문이다(Inglehart & Welzel, 2005). 이처럼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화 변동은 사회경제적 근대화에서 기인하고, 세대에 걸쳐 물질주의 가치에서 탈물질주의 가치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결국 시민참여 방법의 다양화에 기여한다. 근대화와 세계화로 말미암은 사회 내 다양성 증가는 시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탈물질주의 가치를 선호하는 참여자는 주로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고학력자로서 정치적 관심이 클뿐더러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있고, 참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도 탈물질주의자의 청원서 서명, 자발적 선거운동, 보이콧, 시위, 파업, 농성 등에 참여가 물질주의자보다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강수택·박재

흥, 2011; 김욱·김영태, 2006; 어수영, 2004).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한국은 고소득자일 수록 물질주의 가치를 선호한다는 것이다(양해만·조영호, 2018). 사실, 한국에서 지난 약 30년간 탈물질주의자의 비중은 거의 변화 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었던 반면, 물질주의자는 약간 감소하고 혼합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수택·박재흥, 2011; 박재흥·강수택, 2012). 이는 한국이 이례적으로 높은 교육열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으며,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사회경제적 변영을 경험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관점에서 탈물질주의를 견인하는 요인들이 물질주의를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양해만·조영호, 2018).

시민참여는 개인에게 내재화된 시민의식 규범과 탈물질주의 가치와 깊은 관계가 있다. 교육받은 시민들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시민참여가 증가하고 그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한국인의 시민의식 규범과 탈물질주의 가치에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의 시민참여에 대한 두 가지 탐색적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시민참여 유형은 어떻게 분화되어 있는가이다. 이를 분석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민의식 규범(Dalton, 2008)과 탈물질주의 가치(Inglehart & Welzel, 2005)를 배합한 시민참여 유형 모형을 제시하였다. 시민의식 규범과 탈물질주의 가치는 각각 영미권 국가에서 경험적 증거가 축적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이 연구의 결과는 그 자체로 이론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저자가 파악한 선에서, 시민의식 규범과 탈물질주의 가치로 시민참여 유형을 탐색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독창성을 가진다.

둘째, 한국의 시민참여 유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성 변화가 있는가이다. 시민의식 규범과 탈물질주의 가치는 국가의 내외적 요인의 영향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변화에 주목하고 한국의 시민참여 유형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시민참여 유형의 특성과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고 민주주의 성장기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방법

잠재집단분석(LCA: latent class analysis)은 유사한 응답을 한 응답자들을 같은 집단으로 분류하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통계분석’으로서(Anthony & Robins, 2013: 86; Porcu & Giambona, 2017: 129) 유사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시민을 같은 집단으로 유형화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LCA 분석은 탐색적 분석방법으로서 잠재집단모형 선택과 잠재집단 유형별 특성 규명의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인 잠재집단모형 선택은 자료가 내포한 최적의 모형, 즉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2개 집단부터 점진적으로 집단의 수를 늘리며 각각의 모형을 비교 분석한다. 최종적인 모형 선택은 G^2 , AIC, ABIC, Entropy 등의 통계 지표, 개념의 중요성, 결과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다(Lanza et al., 2007: 607; Laska et al., 2009: 5). 모형 선택 과정에 통계적 객관성과 연구자의 식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것은 LCA가 다른 집단 분석방법과 가장 구별되는 장점이다.

두 번째 단계인 잠재집단 유형별 특성 규명은 각 잠재집단의 구성원 확률(latent class membership probabilities)과 변수에 대한 각 잠재집단별 응답 확률(item-response probabilities conditional on latent class membership)을 제시함으로써 잠재집단의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단, LCA는 변수 간 독립성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투입된 변수에 따라 결과는 유동적일 수 있다(이혜림·박재완, 2018: 340). LCA 분석은 STATA 13에 LCA Plugin을 설치하여 실행한다.

2. 분석자료

이 연구가 활용한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는 사회통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구축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매년 수집하고 있다. 연구자는 시간 경과에 따른 한국인의 시민참여 유형을 분석하고 그 특성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2015년과 2017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자료의 조사는 2015년 8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그리고 2017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사이인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에 걸쳐 시민참여 유형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3. 변수의 측정

한국 사회의 시민참여 유형 분석에는 탈물질주의 가치와 시민의식 규범을 측정한 총 9개의 문항이 변수로 활용되었다. 먼저,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 Inglehart(1990)가 제시한 문항을 원용하여 탈물질주의 지수(post-materialism index)를 만들었다. Inglehart의 설문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4개의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선택지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달성해야할 국가적 목표로서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목표 2개와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목표 2개로 설계되어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서 자신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국가적 목표를 2개씩 선택해 총 6개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 연구자는 응답자가 선택한 6개의 목표 중 탈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목표를 합산해 1(물질주의 추구)부터 7(탈물질주의 추구)의 값을 갖는 탈물질주의 지수를 설정하였다.

<표 1>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체계

가치	상위 욕구	중위 욕구	구체적 국가 목표
물질주의	생리적	물리적 안전	국가의 질서 유지
			국방 강화
			범죄와의 전쟁
		경제적 안전	물가인상 억제
			고도의 경제성장
			안정적인 경제 유지
탈물질주의	사회적, 개인적 자아실현	심미적/지적	도시 및 농촌의 미관과 환경보호
			돈보다 아이디어나 이상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 건설
			표현의 자유 확대
		소속감/자기존경	보다 친절하고 인간적인 사회 건설
			직장 및 지역공동체에서 참여 및 권한 증대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증대

출처: Inglehart(1990) pp. 134

시민의식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Dalton(2008)이 제시한 개념 중 연대의식을 뺀 참여, 자율적 의사표현, 준법정신을 원용하였다. 각 개념은 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② 법과 규칙을 준수한다, ③ 국가 위기 시 기꺼이 군복무 한다, ④ 선거 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한다, 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⑥ 사회 또는 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⑦ 조금 비싸더라도 윤리적이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상품을 구

매한다, ⑧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한다 등 8개의 변수로 측정하였고, 모두 7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음 - 7: 매우 중요함)로 구성하였다.

주요 변인의 특성은 다음의 <표 2>에 정리하였다. 전반적으로 2015년에 비해 2017년의 탈물질주의 가치와 준법 지표는 감소한 반면, 참여 지표는 증가하였고, 자율적 의사표현 지표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 규범을 측정한 변인은 모두 중간 값 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바, 한국인의 시민의식은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 위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모든 지표의 표준편차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각 지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됨으로써 개념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변수의 구성 및 특징

변수	측정		2015년		2017년		Min	Max
	내용	척도	m	sd	m	sd		
탈물질주의 가치관 변인								
	탈물질주의 가치관	연속 변수 ¹	2.97	1.38	2.93	1.32	1	7
시민의식 규범 변인								
준법	정직한 세금 납부	연속 변수 ²	6.10	1.10	6.05	1.03	1	7
	법/규칙 준수		6.10	1.09	6.07	1.02	1	7
	국가 위기 시 군복무		5.34	1.41	5.33	1.37	1	7
참여	투표		5.90	1.28	5.99	1.10	1	7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5.11	1.36	5.29	1.28	1	7
	정치적 소비		4.99	1.28	5.15	1.21	1	7
자율적 의사표현	사회/정치 단체 활동		4.25	1.58	4.54	1.56	1	7
	남의 생각과 의견 존중	5.61	1.13	5.61	1.07	1	7	

Note: ¹ 1: 물질주의 가치관 - 7: 탈물질주의 가치관, ²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 7: 매우 중요함

한국인은 물질주의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2.97 \rightarrow m=2.93$). 2015년에는 평균 1.97개 정도의 탈물질주의 가치가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국가적 목표라고 생각했지만, 2017년에는 그 수가 줄어 1.93개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의무적 시민의식 규범의 영역은 미세하게 약화되고 있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m=6.10 \rightarrow m=6.05$),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m=6.10 \rightarrow m=6.07$)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북한과의 전쟁 위험이 아직 존재하고, 징병제를 실행하고 있

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기 시 군복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약화되고 있었다($m=5.34 \rightarrow m=5.33$). 그러나 투표($m=5.90 \rightarrow m=5.99$),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m=5.11 \rightarrow m=5.29$), 정치적 소비를 하는 것($m=4.99 \rightarrow m=5.15$), 사회·정치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m=4.25 \rightarrow m=4.54$)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참여적 시민의식 영역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한국인 성인남녀 15,700명이다. 이 조사는 매년 진행되는 조사로서 동일한 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와 구성에 극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발견되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은 감소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증가한 점이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6.22\% \rightarrow 4.65\%$), 중학교 졸업($8.26\% \rightarrow 6.74\%$), 고등학교 졸업($47.51\% \rightarrow 46.25\%$)은 각각 $1.57\%p$, $1.52\%p$, $1.26\%p$ 감소한 반면, 대학교 졸업($38.01\% \rightarrow 42.36\%$)은 $4.35\%p$ 증가하였다. 이것은 인구구성의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조사 당시 60대 후반이었던 표본이 조사대상에 제외됨으로써 저학력 고령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연령이 시민의식 규범과 탈물질주의 가치에 주요 변수인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당시 60대는 1946년 - 1955년 출생자로 구성되었는데, 60대 후반은 유년기에 한국전쟁의 참상을 경험하였고, 청소년기에는 한국 사회·정치·경제의 혼란기를 관통한바, 60대 초반과도 가치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박재홍·강수택, 2012).

다른 특성들도 이와 같은 흐름의 연속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구소득을 보면 월평균 200만 원 이하 소득층이 감소하는($20.56\% \rightarrow 14.93\%$) 대신에 월평균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하 소득층($24.97\% \rightarrow 32.58\%$)과 월평균 600만 원 이상 소득층이 증가하는($11.90\% \rightarrow 16.48\%$) 현상이 나타났다.²⁾ 월평균 200만 원 이하 소득층이 감소되는 이유

2) OECD는 중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이상 ~ 150% 미만은 중산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기준의 중위소득을 참고하여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구분했다.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은 4,222,533원이고,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4,467,380원이었다. 이 연구에서의 중

〈표 3〉 자료의 특성

		2015년		2017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거주 지역	동	6,109	79.34	6,512	81.40
	읍·면	1,591	20.66	1,488	18.60
성별	남자	3,896	50.60	4,050	50.63
	여자	3,804	49.40	3,950	49.38
연령	19 - 29세	1,386	18.00	1,556	19.45
	30 - 39세	1,536	19.95	1,540	19.25
	40 - 49세	1,809	23.49	1,833	22.91
	50 - 59세	1,769	22.97	1,814	22.68
	60 - 69세	1,200	15.58	1,257	15.71
학력	초졸 이하	479	6.22	372	4.65
	중졸	636	8.26	539	6.74
	고졸	3,658	47.51	3,700	46.25
	대졸 이상	2,927	38.01	3,389	42.36
직장 유형	정부	252	3.27	247	3.09
	공기업	147	1.91	127	1.59
	민간기업	3,352	43.53	4,512	56.40
	비영리기관	193	2.51	191	2.39
	자영업 등	1,421	18.45	651	8.14
	무직 ¹	2,335	30.32	2,272	28.4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00	7.79	484	6.05
	100 - 199만원	983	12.77	710	8.88
	200 - 299만원	1,600	20.78	1,214	15.18
	300 - 399만원	1,678	21.79	1,667	20.84
	400 - 499만원	1,179	15.31	1,521	19.01
	500 - 599만원	744	9.66	1,086	13.57
	600만원 이상	916	11.90	1,318	16.48
총계		7,700	100.00	8,000	100.00

Note: ¹ 주부, 학생, 군휴학생, 취업 준비생 등은 무직자로 분류되었음.

는 저학력 저소득의 고령층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월평균 400만 원 이상 소득층이 증가한 이유는 직장 유형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영업 종사자들이 10.31%p 감소한(18.45% → 8.14%) 반면, 민간기업 근로자가

산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적 요소만을 반영한 개념으로,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의 비경제적인 요소를 제외한다.

12.87%p 증가하였기(43.53% → 56.40%) 때문이다. 이 증감 폭으로 미루어봤을 때, 경기 침체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던 자영업자들이 업체를 정리하고 민간 기업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2. 시민참여 유형과 특징

LCA 분석의 첫 단계는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최적의 잠재 집단 수, 즉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AIC, ABIC, G^2 , Entropy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토대로 2015년과 2017년 자료가 각각 내포하고 있는 최적의 잠재 집단 수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처음에는 양차년도 모두 세 개의 잠재집단 모형이 최적 모델일 것이라 주목하였다. AIC, ABIC 값이 작을수록, G^2 값의 감소폭이 클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었다 (Magidson & Vermunt, 2004). 그러나 이어서 Entropy 값을 확인한 결과, 2015년은 세 개의 잠재집단 모형이 2017년은 네 개의 잠재집단 모형이 집단 간의 배타성이 강한 최적 모형이라고 선정하였다. Entropy 값은 식별된 모델의 집단 간 이질성을 보여주는 추정치로서 1에 가까울수록 식별된 집단의 상호 배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Ramaswany et al., 1993).

〈표 4〉 시민참여의 잠재집단분석 결과

잠재 집단	2015년				2017년			
	AIC	ABIC	G^2	Entropy	AIC	ABIC	G^2	Entropy
2	66537.970	66949.034	66319.975	0.845	66395.070	66810.291	66177.067	0.814
3	59278.380	59896.858	58950.380	0.843	59296.710	59921.453	58968.710	0.822
4	57040.960	57866.847	56602.960	0.819	56229.360	57063.622	55791.360	0.832

Note: G^2 = Likelihood ratio chi-square difference statistics,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BIC =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그림 1〉는 한국의 시민참여 잠재집단 모형 간 응답의 특성을 집약하고 있다. 각 잠재 집단은 2015년 cluster A는 39.74%, cluster B는 34.29%, cluster C는 25.97%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4개의 클러스터는 각각 cluster I 20.96%, cluster II 19.70%, cluster III 35.77%, cluster IV 23.56%로 나타났다. 이들은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순응형(cluster A, cluster I), 이탈형(cluster II), 도구형(cluster B, cluster III), 방관형(cluster C, cluster IV)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7년도의 cluster I은 탈물질주의 가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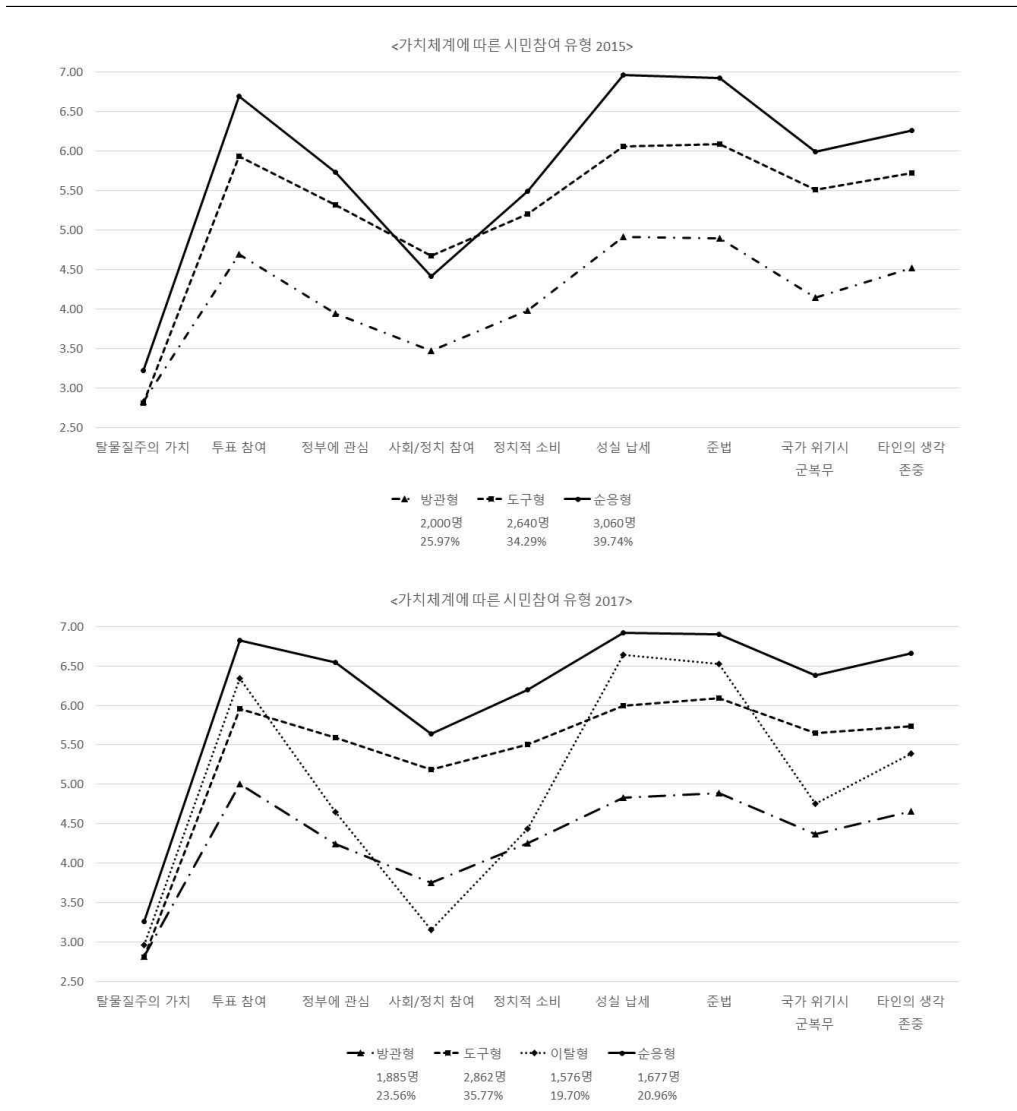
체적으로 높은 시민의식 규범이 내재화된 집단이다. 이는 2015년도의 cluster A 역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들은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투표참여 의지가 높고, 준법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세금을 성실히 내며, 시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정치적 소비를 하는 것 등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복무를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상적” 시민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순응형이라 명명한다. 순응형은 2015년 39.74%에서 2017년 20.96%로 대폭 감소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2015년에 비해 2017년도에는 해당 유형의 시민들은 참여적 시민의식 역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시민의식 규범이 성장하였다.

2017년의 cluster II는 평균 이상의 비교적 높은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의식 규범의 특성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유일한 집단이었다. 의무적 시민의식 규범에 해당하는 투표 참여, 정직한 납세, 법과 규칙의 준수 등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참여적 시민의식 규범에 해당하는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사회·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정치적 소비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복무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등의 중요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유형은 2015년에 유사성을 가지는 집단이 없는 것으로 보아, 2015년 이후 파생된 집단으로 보여 진다. 이들 유형은 19.70%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비교적 높은 편인 것과 이들 유형이 약 19%인 것을 볼 때, 이 집단의 대부분이 순응형에서 이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이 사회정치적 큰 사건 이후에 분리된 유형인 것을 반영하여 이들을 이탈형으로 명명하였다.

2017년의 cluster III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탈물질주의 가치가 가장 낮았고, 거의 대부분의 시민의식 규범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2015년의 cluster B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들은 동일 유형으로 보인다. 이 집단에 속한 시민들은 순응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평균 이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사회·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정치적 소비를 하는 것,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복무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에 반면 탈물질주의 가치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추구하는 집단, 즉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생존과 안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들의 시민참여 유형을 도구형으로 명명

하였다. 도구형은 2015년 34.29%에서 2017년 35.77%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들 유형은 2015년에 비해 참여적 시민의식 역량이 소폭 성장하였다. 그러나 의무적 시민의식 규범에 해당하는 투표 참여와 정직한 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이하일 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 시민참여 잠재집단모형 간 응답의 특성 비교



2017년의 cluster IV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내재된 시민의식 규범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cluster C도 유사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이들 유형은 동일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2015년 25.97%에서 2017년 23.56%로 약간 감소하였다. 이 집단에 속한 시민들도 2015년에 비해 참여적 시민의식 역량이 소폭 성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민의식 규범의 수준이 평균보다 낮았다. 그나마 이들은 투표 참여를 가장 중요한 시민의식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정직한 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보아 해당 유형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바라만 보는 유형으로 보여 이들을 방관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은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성세대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시민의식 규범이 낮은 이유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미 사회의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참여 유형 집단의 특성이 정말 상호 배타적인지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시민참여 유형은 그들이 가진 자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분석의 성별 요인을 제외한 거주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장유형, 월평균 가구소득 등의 요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5> 시민의 참여유형 간 특성

		2015년				2017년				
		순응	도구	방관	χ^2	순응	이탈	도구	방관	χ^2
거주 지역	동	77.42	79.81	81.65	$\chi^2=13.760$ df(2) p=.001	78.59	80.52	82.88	82.39	$\chi^2=14.884$ df(3) p=.002
	읍·면	22.58	20.19	18.35		21.41	19.48	17.12	17.61	
성별	남자	50.26	51.52	49.90	$\chi^2=1.417$ df(2) p=.492	51.52	47.21	52.80	49.39	$\chi^2=14.442$ df(3) p=.002
	여자	49.74	48.48	50.10		48.48	52.79	47.20	50.61	
연령	19 - 29세	13.73	18.86	23.40	$\chi^2=143.946$ df(8) p=.000	16.76	17.01	20.23	22.71	$\chi^2=58.030$ df(12) p=.000
	30 - 39세	19.31	18.18	23.25		17.47	18.15	20.23	20.27	
	40 - 49세	23.50	24.24	22.50		23.26	24.37	21.63	23.34	
	50 - 59세	24.48	23.56	19.90		25.16	22.65	23.31	19.52	
	60 - 69세	18.99	15.15	10.95		17.35	17.83	14.61	14.16	
학력	초졸 이하	8.04	5.19	4.80	$\chi^2=55.780$ df(6) p=.000	5.13	7.36	2.83	4.72	$\chi^2=59.799$ df(9) p=.000
	중졸	9.25	8.30	6.70		6.56	7.99	6.81	5.73	
	고졸	44.08	47.92	52.20		45.50	43.85	46.61	48.38	
	대졸 이상	38.63	38.60	36.30		42.81	40.80	43.75	41.17	

		2015년				2017년				
		순응	도구	방관	χ^2	순응	이탈	도구	방관	χ^2
직장 유형	정부	4.97	2.39	1.85	$\chi^2=109.804$ df(8) p=.000	5.78	3.87	1.99	1.70	$\chi^2=120.524$ df(12) p=.000
	공기업	2.61	1.78	1.00		2.21	1.71	1.43	1.17	
	민간기업	39.12	45.64	47.50		54.44	50.76	59.43	58.25	
	비영리기관	3.43	1.86	1.95		2.03	3.30	1.78	2.86	
	자영업 등	20.03	17.50	17.30		9.66	10.28	7.02	6.68	
	무직	29.84	30.83	30.40		25.88	30.08	28.34	29.34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7.58	7.05	9.10	$\chi^2=25.045$ df(12) p=.015	6.62	7.68	4.65	6.31	$\chi^2=71.659$ df(18) p=.000
	100 - 199만원	12.65	12.42	13.40		9.42	10.98	7.86	8.17	
	200 - 299만원	20.65	21.33	20.25		15.15	15.61	15.30	14.64	
	300 - 399만원	20.13	22.65	23.20		19.14	23.54	19.92	21.49	
	400 - 499만원	15.75	15.57	14.30		19.20	17.32	20.23	18.41	
	500 - 599만원	10.07	9.62	9.10		13.42	10.47	15.62	13.21	
총계	600만원 이상	13.17	11.36	10.65	17.05	14.40	16.42	17.77		
		3,060	2,640	2,000	1,677	1,576	2,862	1,88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 시민참여 유형의 변화

2015년과 2017년 자료를 대비한 결과, 연구자는 몇 가지 변화를 발견하였다. 첫째, 시민참여 유형의 구성에 변동이 있었다. 한국인의 시민참여 유형은 세 개 집단에서 네 개 집단으로 변형되었다. 순응형과 방관형이 각각 18.78%p와 2.41%p 감소한 반면, 도구형이 1.48%p 증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된 시민참여 유형인 이탈형은 주로 순응형에서 파생된 집단으로 추정된다. 자료 수집 시기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파격적인 변화는 대통령 탄핵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둘째, 시민의식 규범의 특성에 변화가 있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2015년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시민의식 규범은 의무적 시민의식 규범이 참여적 시민의식 규범보다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며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Dalton의 주장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자료의 분석 결과는 한국인의 시민의식 규범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사회정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정치적 소비를 하는 것 등 참여적 시민의식 규범이 성장한 것이다. 참여적

시민의식 규범이 성장함으로써 전반적인 시민의식 규범의 수준이 균형 있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집단 별 시민의식 규범의 수준 차이도 뚜렷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투표에 참여하는 것과 정직한 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미세한 감소세를 보였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도 Dalton의 주장처럼 의무적 시민의식 규범이 감소하고 참여적 시민의식 규범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 예견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한국이 경험한 극적인 정치사회 영역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낮은 소통의지와 문제적 문제 해결능력 등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던 차에 비선실세의 존재가 드러난 사건은 시민참여의 변곡점이 되었다. 정치와 사회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현실을 마주한 시민들은 혼란스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참여적 시민의식 규범을 폭발적으로 표출하며 행동하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시민의 시민의식 규범이 고무된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 정치시사 정보를 쏟아낸 트위터, 팟캐스트, 유튜브 등의 역할도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그 동안 정통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정치시사 영역의 면면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킴으로써 준언론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집단인 이탈형은 동일한 경험이 꼭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들은 드러난 현실과 쏟아지는 정보를 인지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 결과,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다할 뿐 다른 영역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순응형에 포함된 ‘좋은 시민’이었던 이들은 마주한 현실에 환멸을 느낌으로써 정부에게 주었던 신뢰를 철회하고 오히려 정치사회를 외면한 것이다.

셋째, 집단 간의 상대적 수준 차이는 있었지만, 모든 집단의 탈물질주의 가치관은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변화도 없었다. 순응형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물질주의자로 분류되어 있는바, 대다수의 한국인이 물질주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경제적 발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낮은 것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자(강수택·박재홍, 2011; 양해만·조영호, 2018; Bomhoff & Gu, 2012),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강수택·박재홍, 2011; 박재홍·강수택, 2012; 김옥·김영태, 2006; 양해만·조영호, 2018; 어수영, 2004).

선행연구는 이것이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갖는 양면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아시아의 용이라 불릴 정도로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룸으로써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경제발전을 지속시킬 힘의 원천인 건강한 거버넌스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아진 국가의 생활양식 수준은 부작용

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었던 한국은 OECD 가입 후 1년 만인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인의 가치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저지한 중요한 사건이었다(박재홍·강수택, 2012). 요컨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상태에서 맞게 된 대규모 구조조정, 높은 실업률, 불안한 가계수입, 양극화 등은 한국인이 생존과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는 물질주의를 지속적으로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최근 한국 사회의 시민참여가 활발하다. 참여 규모도 늘고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국인의 시민참여 유형과 그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고, 짧은 기간 안에 역동적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시민참여 유형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돌파하면서 2015년 세 개 집단에서 2017년 네 개 집단으로 변화하였다. 각 집단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순응형, 도구형, 방관형 및 이탈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한국인의 의무적 시민의식 규범은 미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참여적 시민의식 규범은 상당히 많이 성장하였다. 이 같은 시민참여 특성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인의 시민참여 유형 간 이동을 초래했다. 순응형과 방관형이 각각 18.78%p, 2.41%p 감소한 반면, 도구형이 1.48%p 증가하였는데, 흥미로운 점은 집단 간 이동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순응형에서 이탈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유형인 이탈형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각 집단에 속한 한국인이 가진 자원의 특성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넷째, 모든 집단의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낮게 형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시민의식 규범은 잘 구축된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탈물질주의는 약 30년 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Inglehart & Welzel(2005)의 주장과 달리 탈물질주의가 근대화와 민주화를 매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한국에서 전개되는 사회 현상은 종종 서양에서 태동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지금과 같이 민주화의 발전 경로가 다른 이유는 삶의 경험과 방식이 축적되며 형성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 시민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안정(박재홍·강수

택, 2012; 양해만·조영호, 2018), 문화적 특성(정수복, 2007; Bomhoff & Gu, 2012), 식민지 경험, 실존하는 전쟁 위협 등의 원인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민주화의 수준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질주의를 선호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Democracy Index 2018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이지만 참여, 탈물질주의 가치 등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문화 수준 때문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는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가 압축적인 과정을 거치며 동시에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과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의 폐해로부터 신탁통치, 한국전쟁, 군사독재,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민주화의 첫 걸음을 뗀 한국이 이처럼 단기간에 근대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민주화를 이룬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에 대한 학습은 시민의식 규범의 변화로 이어졌다. 변화된 시민의식 규범은 다시 정부에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참여로 이어짐으로써 지금의 독특한 시민참여 유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주의의 후발주자인 한국의 민주화 경로는 탈물질주의에 비해 학습의 매개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참여 유형과 특성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민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입장과 태도를 분명하게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미래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다. 한국은 보편적인 현대 사회의 특성상 다양성과 복잡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 나가야 하는 특수성도 안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혼자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난제(wicked problems) 역시 매우 많이 쌓여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통치 영역에 시민의 참여를 초청해 공공난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 민주주의, 협력적 거버넌스 등이 각광받고 있다. 새로운 통치 방식이 수사적 표현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적 기술과 성숙한 시민의식 규범을 겸비한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다(이영라·이숙중, 2018).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주장이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참여의 장과 거리를 두는 시민이 다시 참여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2015년과 2017년 자료만을 사용한 탐색적 분석으로서 변화의 추세를 포괄적이고 깊게 파악하지는 못했다. 한국 시민의 참여유형과

특성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축적될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수택·박재홍. (2011).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와 탈물질주의. 「OUGHTOPIA」, 26(3), 5-38.
- 김동노. (2013).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를 통해 본 시민운동의 성장과 한계. 「현상과인식」, 37(3), 59-85.
- 김용철. (2016).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현대정치연구」, 9(2), 31-62.
- 김옥·김영태. (2006). 쉬운 참여와 어려운 참여: 대전과 목포지역 젊은이의 가치정향과 정치참여. 「정치정보연구」, 9(1), 179-202.
- 박재홍·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한국사회학」, 46(4), 69-95.
- 양해만·조영호. (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 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2(1), 75-100.
- 어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1990-2001년 간의 변화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1), 193-214.
- 이숙중·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이승중·김혜정. (2018).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영라·이숙중. (2018).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2), 159-190.
- 이혜림·박재완. (201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7(4), 329-357.
- 주성수. (2017). 한국 시민사회 30년(1987-2017)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NGO」, 15(1), 5-38.
- 최태현. (2014). 참여가치인식과 정책이해도를 통한 시민참여 유형화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1), 231-256.
- 한국행정연구원. (2015).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_____ . (2017).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Anthony, E. K., & Robbins, D. E. (2013). A latent class analysis of resilient development among early adolescents living in public hous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 82-90.
- Barnes, S. H., Kaas, M., & Allerbeck, K. R. (1979).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and London: Sage Publications.

- Bomhoff, E. J., & Gu, M. M. -L. (2012). East Asia Remains Different: A Comment on the Index of "Self-Expression Values," by Inglehart and Welzel.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3), 373-383.
- Chang, W.-C. (2016). Culture, Citizenship Norm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mpirical Evidence from Taiwa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2), 256-277.
- Conge, P. J. (1988). The Concept of Political Participation: Toward a Definition. *Comparative Politics*, 20(2), 241-249.
- Dalton, R. J. (2008).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56(1), 76-98.
- Denters, B., Gabriel, O., & Torcal, M. (2007). *Norms of Good Citizenship*. In J. W. V. Deth, J. R. Montero, & A. Westholm (Eds.), *Citizenship and Involvement in European Democracies* (pp. 87-107): Routledge.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8). *Democracy Index 2018: Me too? Political participation, protest and democracy*. The Economist.
- Hooghe, M., Oser, J., & Marien, S. (2016). A comparative analysis of 'good citizenship': A latent class analysis of adolescents' citizenship norms in 38 countrie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31(1), 115-129.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 Welzel, C.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za, S. T., Collins, L. M., Lemmon, D. R., & Schafer, J. L. (2007). PROC LCA: A SAS Procedure for Latent Class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671-694.
- Laska, M. N., Pasch, K. E., Lust, K., Story, M., & Ehlinger, E. (2009). Latent Class Analysis of Lifestyle Characteristics and Health Risk Behaviors among College Youth. *Society for Prevention Research*.
- Lyons, W. E., & Lowery, D. (1989). Citizen Responses to Dissatisfaction in Urban Communities: A Partial Test of a General Model. *The Journal of Politics*, 51(4), 841-868.
- Magidson, J., & Vermunt, J. K. (2004). Latent Class Models. In D. Kaplan (Ed.),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pp. 205-232).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Mcbeth, M. K., Lybecker, D. L., & Garner, K. A. (2010). The Story of Good Citizenship: Framing Public Policy in the Context of Duty-Based Versus Engaged Citizenship.

Politics & Policy, 38(1), 1-23.

Milbrath, L. W., &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Muller, E. N. (1982). An explanatory model for differing types of particip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0, 1-16.

Oser, J. (2016). Assessing How Participators Combine Acts in Their "Political Tool Kits": A Person-Centered Measurement Approach for Analyzing Citizen Participation. *Social Indicator Research*, 133(1), 235-258.

Oh, Y., & Park, J. (2013). The effect of Political institutes on the use of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8(2), 25-48.

Porcu, M., & Giambona, F. (2017).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Analysis With Application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7(1), 129-158.

Putnam, R. D.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Ramaswamy, V., Desarbo, W. S., Reibstein, D., & Robinson, W. T. (1993). An Empirical Pooling Approach for Estimating Marketing Mix Elasticities with PIMS Data. *Marketing Science*, 12(1), 103-124.

Sabucedo, J. M., & Arce, C. (1991).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multidimension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0, 93-102.

Scaff, L. A. (1975). Two Concep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8(3), 447-462.

Seligson, M. A. (1980). Trust, Efficacy and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 Study of Costa Rican Peasa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1), 75-98.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ABSTRACT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 of Citizen Participation Patterns in South Korea

Hyerim Lee & Youngra Lee

This study explored the participation profiles of citizen in South Korea using a latent class analysis approach and explored whether these profiles varied across time. Post-materialism and citizenship norms internalized by individuals were utilized as the main criteria in analyzing the profiles. The reason for choosing Korea as a case study is because it experience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which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attern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study utiliz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face-to-face survey of 15,700 adults (ages 19 - 69) and identifi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patterns of citizen participation between 2015 and 2017. There were three styles (Conformity, Implementation, Bystander) of citizen participation in 2015 but one more style (Deviation) was added in 2017. The main reason for the change was that engaged citizenship norms grew, breaking through the political vortex. However, deviation has an especially low level of engaged citizenship among their internalized citizenship norms. It can be inferred they were disillusioned with politics and ignored political society in the process of breaking through the political vortex.

【Keywords: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ship norms, Post-materialism, Latent class analysis (LCA)】